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보고서

2020. 1.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 제 교 류 담 당 관 실

I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 일자·장소 : '20. 12. 16(월)~12. 20(금), 아부다비 국제회의장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랍에미리트 정부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56개 당사국 정부, 유럽연합(EU),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국제기구 대표 등 1,200여명
 - ※ 한국 : (권익위) 위원장, 신고자보호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강미영, 조혜림, 한효정, (오스트리아국제기구대표부) 조주연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형사과 김남수 검사

□ 주요 의제

- 당사국의 협약 이행점검 및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 이행 발표
- 협약 실무그룹(이행점검, 부패예방, 자산회복, 국제협력) 활동 승인
- UN 반부패 특별총회 준비관련 사항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 총회 일정

일자	시간	본회의
12.16(월)	10:00 ~13:00	개회 선언, 의장단 선출, 의사일정 채택, 기조연설 등
	15:00~18:00	일반토론
12.17(화)	10:00~13:00	일반토론(계속)
	15:00~18:00	일반토론(계속)
12.18(수)	10:00~13:00	부패 예방
	15:00~18:00	자산 회복 및 국제협력
12.19(목)	10:00~13:00	협약이행점검 : 기술지원
	15:00~18:00	UN 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12.20(금)	10:00~13:00	기타 사안
	15:00~18:00	결의사항 검토 및 채택, 제8차 총회 일정(안), 의사록 채택

Ⅱ. 주요 결과

- 박은정 위원장은 12월 16일(월) 정부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의 1주기 이행점검 이후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 관련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과, 2020년 6월 개최 예정인 국제반부패회의 및 국제 반부패회의 당사국 총회 개최를 소개하면서,
 - 공공부문과 민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동 회의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소통이 장이 될 것이며, 참석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함
- 지역대표 및 각국 정부대표들은 2021년 상반기에 열릴 UN 반부패 특별총회 개최를 환영하였고, 동 총회에서 채택될 각국정상간의 정치적 선언문 채택을 위해 준비 일정과, 선언문에 포함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음
 - 또한, 부패예방, 자산회복, 국제협력, 기술지원 등 분야에서 법제 개선 등 협약 이행 노력과 이행점검 참여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음
 - NGO측은 이행점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또 UN반부패특별총회에 정치부패, 불처벌, 젠더이슈 등이 의제가 포함되기를 희망
- 12월 20일(금) 당사국 총회는 ① 자산회복 국제협력 강화 및 동결·압류·몰수 자산의 관리, ②공공부문 청렴성 촉진, 부패로부터 스포츠 보호, ③UN 반부패특별총회, ④부패척결에서 반부패기관의 효과성 제고, ⑤ 부패 측정, ⑥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조장하는 부패 예방 및 척결, ⑦감사기구와 반부패기구간 협력 제고에 대한 아부다비 선언문, ⑧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제 2 주기 연장 등 10개 이상이 채택됨

□ 기타 대표단 활동

- 박은정 위원장은 12.18일 스페셜 이벤트로 열린 UNDP 주관 ‘다음세대 부패척결: 최첨단 기술과 부패예방’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여
 - 한국의 UNDP와의 공동사업으로 개도국대상 반부패 정책 기술지원 활동과, 한국의 e-전자정부, 국민신문고 등 ICT기술을 통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대해 발표하여, 참석자들로 부터 많은 관심대상이 되었음
- 한편, 권익위원장은 스리랑카 뇌물부패사건수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CIABOC) 위원 및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 스리랑카측은 국가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였고, 원래 수사위주 기관이었으나 최근에 부패예방 기능을 추가하여 50여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 한국의 여러 우수 반부패 정책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청렴 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한국의 대학교육에서 뇌물·부패 예방과 윤리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문의
 - 우리측은 반부패 교육과 더불어,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등의 제도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대학교 청렴교육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함(관련 자료 번역 후 전달)
- ※ 수신자 : CIABOC 국장 Mr. Sarath Jayamanne (dgcia bocsl@gmail.com)
- 권익위원장은 팔레스타인 반부패기관(Palestin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기관장 및 UNDP 중동사무소 직원과 공동 면담을 통해,
 - 팔레스타인측은 동 기관이 부패예방과 조사, 의식제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과 협력할 부문을 찾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특히 2019-2022 국가 반부패 전략 이행 톨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사례를 연수받고 싶다고 언급
 - 우리측은 청렴도평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외국 반부패

기관대상 정책 전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선 웨비나를 통해 신고자보호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 팔레스타인측은 추후 국가반부패전략과 신고자보호법을 송부하면,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함
- 권익위원장은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deral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 FEACC) 사무국장 등과 면담하여 한-에티오피아 간 반부패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 에티오피아측은, 조만간 반부패 관련법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 전에 한국의 우수정책을 연수해줄 것을 요청한 바
 - 우리측은 웨비나를 통해서도 경험 공유가 가능함을 알려주었으나, 한국방문을 희망하여 1~2월 중에 정책연수를 하기로 함
 - ※ 우리측은 UNDP 정책센터와 함께 연수 일정을 조율중임
- 이외에도, 짐바브웨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 대표들과 면담하고 상호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한국과 반부패 정책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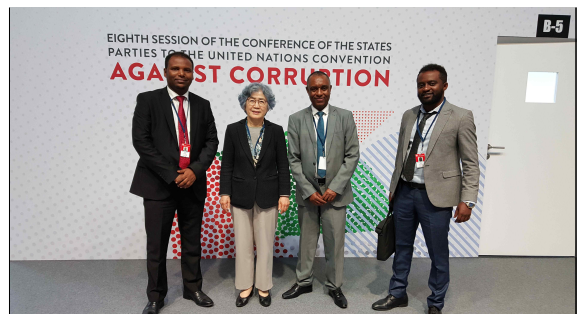
<제8차 UN당사국 총회에서 기조연설(12.16)>



<UNDP 워크숍에서 기조연설(12.18)>



<팔레스타인 부방위 대표단과 면담(12.18)>



<에티오피아 FEACC 대표단 면담(12.17)>

Ⅲ. 향후 계획

□ 관찰 및 평가

- 2021년 4. 26~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UN 반부패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정상들의 정치적 선언문 채택을 위한 총회준비 회의가 3차례 UN 반부패협약 실무그룹회의와 병행하여 열릴 예정인 바,
 - 우리 정부측은 국제사회가 부패척결과 국제협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제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관계 부처 및 시민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
- 금번 총회에서 다수의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기존 결의안 주제와 중복되는 주제(공공부문, 기술지원, 자산회복 등)도 있으나, 일부는 특정 부문별 부패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작성되고 있음
 - 부패 평가 등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결의안에 대해서는 결의문 작성을 위한 비공개 회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
- 한편, 옵저버로 참석한 여러 국제기구와 NGO들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발언권자로는 UNCAC Coalition과 국제투명성기구로 보이며,
 - UNCAC Coalition은 주로 협약 이행점검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사회내 반부패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바,
 - 국제투명성기구가 UN 특별총회시 채택될 정치적 선언문에 제안한 주제(거대부패, 불처벌, 실소유자투명성, 성상납 등 젠더 이슈)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총회 기조연설과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된 워크숍 등에서, 한국정부의 협약 이행 노력,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공조, 2020년 6월 개최할 국제반부패회의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등 대표단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향후 정책연수, 정책자료 제공 등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IV. 총회 세부내용

I. 환영사

- 개회식에서는 UAE의 재무부 장관이자 두바이 제2 지배자(Deputy Ruler of Dubai)인 Sheikh Hamdan bin Rashid Al Maktoum, UAE 감사원장 Harib Saeed al-Amimi, UN마약범죄사국 집행이사의 축사가 있었음
- UNODC 집행이사는 UN사무총장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사무총장은 지속가능개발(SDG) 목표를 위한 행동의 단계로 국제사회가 진입하면서, 무엇보다 불법 자금 흐름에 의한 자원의 누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반부패에 대응하여 단결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 사무총장은 2021년에 열릴 최초 반부패 UN총회 특별 세션을 언급하면서, 총회가 부패척결을 우선순위로 삼는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사무총장은 국제적 금융 시스템내 조력자와, 자산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고, 공적 자금이 세탁될 수 있도록 하는 허점(loopholes)이 있기 때문에 거대 부패(grand corruption)가 가능하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핵심적임에 주목하였음.
- UAE 감사원장은 제8차 당사국 총회 참석 대표단을 환영하면서 UAE 정부가 부패 예방과 척결, 은닉 자산을 회복하는데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부패범죄에 대항하는 국내적 입법을 시행하는데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
- 또한 감사기구와 반부패기구간 협력을 개선할 필요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감사기구조직(IOSAI)와 UNODC간 MOU를 언급하였음

II. 회의 조직

가. 개회

- 제7차 총회 의장이었던 과테말라 Maria Consuelo Porras Argueta와 제8차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UAE 감사원장인 Harib Saeed al-Amimi가 개회사를 하였음
- UNODC 집행이사는, 총회가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메카니즘 등을 통해 부패 척결의 핵심 무기를 대표한다고 언급함. 집행이사는 총회가 부패예방과 자산회복에서부터 부패측정, 기술 활용,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반부패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집행이사는 2021년 열릴 UN 반부패특별총회를 언급하면서, 동 특별총회가 부패로 인한 위협을 해결하는데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합의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음

나. 의장단 선출

- 2019년 12월 16일 1차 회의에서 총회는 UAE 감사원장인 Harib Saeed al Amimi를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후 12월 19일 8차 회의에서 다음의 의장단을 선출하였음:
 - 부의장 : Vivian N.R. Okeke (나이지리아)
Ondrej Gavalec (슬로바키아)
Christine M. Cline (미국)
 - Rapporteur : German Andres Calderon Velasquez (콜롬비아)

다. 의제 및 업무 조직 채택

- 1차 회의에서 총회는 제8차 회의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라. 참석자

- 제8차 총회 참석 당사국은 다음과 같음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

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렘,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Holy See,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키르기스,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아일랜드,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몬테니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Niger,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수단, 스웨덴,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EU

○ 읍저버로 참석한 나라로는 : 통가

○ 그 외 UN 관련 읍저버로는 : UN인권고등판무관, UNDP, UN 레지던트 코디네이터(아랍에미리트), 바젤거버넌스연구소, 국제형법개혁형사정책센터, IMF, 월드뱅크

- 국제기구 옵저버로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연합, 아시아개발은행, 아랍걸프국협력이사회, 유럽이사회,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nterpol, OECD, 국제관세기구
- UN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의 비정부기구 옵저버로는 : 환경경제정의아프리카네트워크, 19조 검열반대 국제센터, 시민정치적자유센터, 민주주의개발센터, Earth(인류에 대한 공감 활동주의), GOPAC(반부패의원연대), 글로벌 위트니스, HEDA 리소스센터, 국제변호사협회, 국제선거제도재단, Peace Worldwide, 아태지역조직, 베냉 사회적 감시, 국제투명성기구, World Justice Project, WWF세계자연기금
- 제17조 절차규정에 따라, 사무국은 UN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갖지 않은 관련 비정부기구 명단을 회람하였고, 다음은 관련 비정부기구 옵저버임 : 남수단진전, 아프리카 기업시민권연구소,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에 대한 NGO연합, Centro de Estudos em Administracao Publica e Governo, 모리셔스 반부패연합, 콩고세계건설협력, Endale Edith 재단, 초국경조직범죄반대 국제 이니셔티브, 국제어업종사자개발신탁, 국제시대범죄및형법 국제포럼, 리비아 투명성연합, 지역사회개발연합, 마케도니아국제협력센터, 인권 및 수형자 지원 사회, 반부패전문가리뷰, 아프가니스탄개발 복지연합, 짐바브웨 투명성기구, UNCAC Coalition, WEF 반부패파트너십
- 과거 전례에 따라 2019년 12월 20일 의장단의 권고로 총회는 쿠르드 투명성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동 기구가 국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참여 반대를 결정하였고, 또한 총회는 다음 기구에 대한 참석 반대 의견은, 해당 기구가 반대의견을 낸 국가의 영토에 있지 아니하고, 거주 국가에서는 참석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기에,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 (영국)메리여왕대학 국제국가범죄이니셔티브, (루마니아) 전문가포럼연합, 파키스탄 입법발전 및투명성연구소

- 의장단은 156개 당사국 중에서 152개 당사국이 신임장 요건을 갖추었다고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차드, 말라위, 르완다, 남수단 4개국이 절차 규정 제18조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함. 의장단은 이들 당사국에 늦어도 2020년 1월 13일 전까지 신임장 원본을 사무국에 제공할 것을 요청함

라. 일반토론

- 77 그룹 및 중국을 대표하여 이집트는 부패가 안보, 안정성, 법치,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장애임을 강조하고, UN반부패협약의 전면적 이행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뿌리 뽑아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이런 측면에서 당사국총회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음. 동 그룹은 2020년 4월 일본 교토에서 열릴 예정인 UN 범죄예방 및 범죄정의 제14차 총회와 2021년에 열릴 UN 반부패특별총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태국 대표는 아태그룹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부패 예방과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대표는 도하선언의 사후조치와 2021년 개최될 UN반부패 특별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산회복은 협약의 근본 원칙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적 자금흐름에 대응할 필요성과 약탈 자산의 원천 국가로의 환수를 지원할 필요를 강조하였음
- 유럽연합 대표는 부패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며 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부패 예방과 척결은 법치, 평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존중,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 유럽 전체에서 신고자보호 기준을 채택하였고, 실소유자정보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회원국간 금융 및 기타 정보의 접근과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법을 언급하였음. 이행점검 절차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2021년 UN 반부패특별총회 개최를 환영하였음.

-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한 이집트 대표는 앞서 77그룹과 중국을 대표하여 한 발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해, 지속가능 경제발전에 대한 부패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였음. 자산회복이 협약의 근본 원칙임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이 협약 4장과 5장을 종합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2021년에 열릴 UN 반부패 특별총회를 환영하였고, 무엇보다 대규모 재산과 외국뇌물과 관련한 부패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비동맹운동을 대표하여 발언한 아제르바이잔은 부패가 평화와 안보, 법치,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였음. UN 절차를 위반하여 비동맹운동 회원국에 부가된 제재를 비난하였고, 그러한 조치가 종결되기를 촉구하였음.
- 연사들은 부패의 초국가적 성격과, 민주적 거버넌스, 법치, 인권, 평등, 안보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대한 파괴적 영향을 강조하였음. 연사들은 지속가능 경제 및 사회발전을 방해하고, 공공서비스 부문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정치적 불안을 증가시키며, 민주적 제도와 가치를 저해하고, 정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잠식하며, 인권에 대한 원칙을 위반하며, 부정과 불공정을 조장하며, 대립에 기여하며, 환경적 손실을 조장하며,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전달하고, 기후변화와 빈곤에 대처하는 능력을 방해하였음에 주목하였음.
- 연사들은 또한 부패가 교육, 건강, 사법적 접근 등 부문별로도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였음. 부패와 조직범죄, 테러, 밀수, 기타 중대 범죄행위 간 연계를 강조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응이 종종 너무 느리고 부족함에 주목하였음. 당사국들은 모든 형태의 부패에 저항하고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부패 공직자와 부패 수익을 위한 도피처(safe haven)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연사들은 2021년에 열리는 다가오는 UN 반부패 특별총회 준비를 환영하였음. 일부 연사들은 초국가적이고, 복잡하며, 거대한 부패 수사 와 기소를 다루고, 대규모의 약탈 재산의 환수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제반부패법원 설립 등 불처벌(immunity)을 종식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요청하였음. 또 다른 연사(중국)는 정치적 선언문이 특별총회에서 채택된다면 3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기존 국제 제도의 전면적 이행, 협약 이행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잡힌 접근, 부패 예방과 척결은 공동의 공유된 책임이라는 인정. 한 연사는 반부패 노력이 당사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음. 한 연사(오스트리아)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 한 연사는 현재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협약이 추가되고 업데이트될 것을 요청. 다른 연사들은 현재 협약상 의무의 효과적 이행 등을 통해 복잡하여 다면적인 부패 사건을 탐지, 수사, 기소하기 위한 국제적이고, 공동의 총체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음
- 다수의 연사들이 2번의 이행점검 과정을 통해 긍정적 결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음. 일부 연사들은 이행점검 메카니즘이 UNODC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야 함을 요청. 일부 연사들은 당사국들이 이행점검 절차에 시민사회를 참여토록 할 것을 권고함
- 많은 연사들이 1차 이행점검에서 나온 권고의 결과로 해당국에 이행된 긍정적 개혁을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관련 형사입법의 채택과 개정, 법치 강화를 위한 노력, 특별 반부패 법원의 신설, 신고자보호 프로그램 강화, 특별수사기법의 사용을 허용하는 입법의 채택과 형사 부문에서 투명성 증가와 법원에의 접근을 지원하는 조치의 채택 등이 포함. 연사들은 또한 1차 이행점검 이후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였는데, 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를 지원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정 등이 있음.

- 일부 연사들은 반부패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하였음. 자카르타 반부패기관원칙 선언문이 언급되었음. 또한 일부 연사들은 기소 건수의 증가, 몰수 및 환수자산액의 증가 등 조치를 언급하였음.
- 한 연사는 협약 이행점점 절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른 이행점점 절차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과 가치를 언급하였음. 여기에는 FATF,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를 위한 이스탄불 반부패행동계획, 유럽이사회의 GRECO 동료간 이행점점 절차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였음.
- 연사들은, 국가 기구, 위원회, 독립 기관이 청렴성 강화와 굿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부패를 척결할 목적으로 한 국가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연사들은 이들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할 중요성에 주목하였음. 일부 연사들은 부패 척결 전략과 정책이 포용적이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음. 이러한 참여는 시민사회, 젊은층, 학계, 언론, 여성단체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함. 일부 연사들은 고위험 부문에 존재하는 특정 문제를 목표로 삼은 부문별 반부패 전략을 설명하였음
- 많은 연사들은 자국 정부가 기술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UNODC와 기타 양자 공여국과 지원 제공자들의 기술지원과 개발된 틀에 감사를 표하였음. 여기에는 독일국제협력기구(GIZ), IACA, UNDP, OECD, 아메리카국가기구(OAS),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UN태평양지역반부패프로젝트, 월드뱅크와 StAR이니셔티브 등이 있으며, UNODC가 계속 이런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연사들은 입법 개정, 역량배영, 금융수사, 재산신고시스템, 몰수 자산 회복 및 관리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여러 연사들이 UNODC에 추가적인 비정규예산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 이 외에도 연사들은 시민사회 참여 필요성, 교육의 중요성, 민간부문과의 협력, 공무원의 대한 행동강령, 재산등록 제도, 실소유자 투명성, 신고 채널 마련, 부패위험평가 개발, 불처벌 종식, 자산회복 사건 경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경험 및 정보공유 등에 대해 언급하였음.
- 당사국 대표들의 발언이 끝난 뒤, 오퍼버 참석자들의 발언이 뒤를 이었는데, UNDP 대표는 당사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UNDP와 UNODC 파트너십에 주목하였음. 월드뱅크는 StAR 이니셔티브 등 부패예방과 자산회복에 대한 기술지원을 설명하였음. IMF는 일련의 우선순위 부문에서 거버넌스 취약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였고, IACA는 부패예방과 청렴성 촉진 부문에서 IACA가 제공하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학위를 설명하였음. GRECO 대표는 부패척결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감독하고 사후점검하는데 있어 GRECO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입법과 법집행, 시민사회의 참여, 강력한 정치적 의지 등 다차원적 접근을 강조하였음
- 시민단체 대표로는 UNCAC Coalition에서 발언하였는데, UN 반부패 특별총회를 환영하고, 협약 2주기 이행점검이 늦어지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follow-up이 부족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점검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실소유자 정보 DB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언론인에 대한 살해 등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
- 또, TI 의장은 시민적 공간 civic space이 축소되고 있는 전세계적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정치 부패 grand corruption, 고위공직자 불처벌 impunity, 실소유자 투명성 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부패척결 노력, 성상납 sextortion 등 부패에서 젠더 관점의 주류화 등의 주제가 UN 반부패 특별총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

III. 부패예방

- 2019.12.18일에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총회는 동 의제를 논의하였고, 총회 의장이 주재하였음. 의장은 부패예방 실무그룹의 지난 2년간 활동을 인정하면서, 주요하게는 이해충돌, 재산신고제도의 활용과 효과, 반부패전략의 개발·평가·효과에 따른 교훈이라는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부패예방관련 조치의 이행을 위해 기술지원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사무국은 “반부패 예방조치의 촉진”(결의안 7/5) 및 “마라케시 부패 예방 선언에 대한 사후조치”(결의안 7/6) 이행을 위한 성과를 보고함. 사무국은 UN반부패협약 제2장 이행 관련 분석보고서(관련 자료 CAC/COSP/2019/9)와 UNODC가 국가 반부패전략, 반부패기구의 역량 강화, 입법 지원, 사법부문 청렴성 강화, 반부패교육 촉진 등 당사국들의 부패예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역, 전세계 단위의 기술지원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음. 사무국은 UNODC가 부패 예방에 있어 우수사례를 모으는 국제 관측소(international observatory)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 사무국은 "UN반부패협약에 따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식에 기반한, 특히 고액자산이 연루된 모든 형태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척결할 것“(결의안 7/2)와 관련하여,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담은 오슬로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CAC/COSP/2019/13)
- 많은 당사국들은 최근 부패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와 우수사례 등을 보고했는데, 그 중에는 부패방지 조치의 제·개정, 업데이트와 더불어 투명성, 정보접근법, 공공조달, 자금세탁방지, 신고자보호, 실소유자, 이해충돌 관련 입법화, 규정 및 지침마련 등을 보고하였음
- 또한 당사국들은 종합적인 국가 반부패정책·전략, 개방정부 이니셔티브

브의 마련과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강조하였음. 전략으로는 국가단위 종합전략에서부터, 야생동식물, 채굴산업, 공공재정관리 등 부문별 전략까지 다양함. 위험 평가, 이행상황과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 시민들에게 관련 프로그램 이행현황정보를 제공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것에 주목함.

- 한편, 읍저버로 참석한 TI는 총회 참석예정이던 언론인이 감금되고 쫓겨난 것에 크게 불만을 표하면서, 언론인들은 대중의 의식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2021년 UN 반부패 특별총회에 언론인 보호가 의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TI는 이외에도 특별총회 의제로 실소유자와 젠더와 부패 2가지를 더 제안하였음.

IV. 자산회복과 국제협력

- 2019.12.18일에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동 의제를 논의하였고, 총회 의장이 주재하였음. 의장은 “국제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결의안 4/2)와 “부패수익의 확수와 자산회복에서 국제협력 지원”(결의안 6/2), “효과적인 자산회복의 촉진”(결의안 6/3), “국제협력과 자산회복을 위한 사법공조 강화”(결의안 7/1)가 있었음을 총회에 상기시킴.
- 사무국에서 자산회복 부문 활동 보고로, 협약 제5장 이행에 대한 주제 보고서(CAC/COSP/2019/10)과 다양한 유형의 희생자에 대한 확인과 보상 관련 우수 사례와 자산회복에 대한 영향(CAC/COSP/WG.2/2019/5)에 대한 참고자료를 소개하였음. 사무국은 또한 제56조(범죄수익 수사관련 사전정보제공에 대한 특별협력) 관련 시의적절한 정보공유와 자산회복 실무자 네트워크간 소통과 조정 개선에 대한 비구속적 지침(CAC/COSP/WG.2/2019/4), 동일 주제에 대한 배경 문서(CAC/COSP/WG.2/2018/5)를 언급하였음. 또한 사무국은 동결·압수·몰

수 자산의 관리에 대한 일련의 비구속적 지침들(CAC/COSP/WG.2/2018/3, CAC/COSP/WG.2/2019/3, CAC/COSP/WG.2/2019/16)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또, 회복 및 반환된 은닉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우수사례 파악 업무와, 고액 자산 연루 부패에 대한 2차례의 전문가 그룹회의 활동을 추가로 업데이트함*. 또, 실소유자 확인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였고, 당사국이 압수, 몰수, 반환 또는 처분 자산 금액 정보를 수집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고액자산 연루 부패에 대한 전문가 그룹회의(Global Expert Group Meeting on Corruption involving Vast Quantities of Assets): 2017년 11월 채택된 당사국 총회 결의안 7/2 “종합적, 다각적 방식으로 고액자산연루 부패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척결할 것”에 근거하여, 1차 회의는 2018.12월 페루 리마에서 40여개국의 부패 사건 수사 및 기소 전문가들이 모였고, 2차 회의는 2019.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려, 오슬로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음. 고액자산 연루 부패(Corruption that involve vast quantities of assets)라는 용어는 UN반부패협약 전문에 나오며, 이는 국가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저해한다고 함

○ UNODC-월드뱅크 StAR(Stolen Asset Recovery, 약탈자산회복) 이니셔티브의 대표 발언에서는, 제1회 자산회복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Asset Recovery)이 지난 UNCAC 총회 이후 개최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튀니지, 우크라이나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전세계 20개국의 수요에 매년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여러 새로운 국가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언급.

- 국가 지원 활동으로는 수사 및 기소 담당자에 대한 금융조사 훈련,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위한 새로운 입법 도입, 공조 요청국과 피요청국간 관계 형성 등을 포함함. 최근 발간물로는 “부패 사건에서 국경간 자산회복 지원을 위한 파산절차”(Going for Broke: Insolvency Tools to Support Cross-Border Asset Recovery in Corruption Cases)가 있음. 한편, StAR 이니셔티브에 대한 외부 평가에서 동 이

니셔티브의 2030년까지 연장을 권고하였음.

※ 동 발간물은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와 협력하에 제작된 것으로, 실제 부패 범죄수익 은닉사건에서 일반적인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외에, 파산절차를 활용해 은닉된 재산을 환수한 사례와, 이를 위한 소송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 사무국은 국별 관련기관에 대한 온라인 디렉토리 관련 진전상황을 알리면서, 관련 데이터가 SHERLOC(Sharing Electronic Resources and Laws on Crime, 범죄관련 자료 및 법령의 전자적 공유) 온라인 포털로 이동했음을 보고
- 이후 당사국 연사들의 발언에서는, 범죄수익 환수와 자산회복에서 타국에 대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 제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자국내 개혁들을 공유하였음. 이러한 개혁으로는, 새로운 입법 또는 개정안의 도입, 자산회복 전담기구의 설립, 국내외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 개발, 가치 기반 및 비선고 기반 몰수 제도의 도입 등이 있음. 일부 당사국은 수사, 기소, 범죄인인도 등에서 협약을 사법공조의 요청 또는 지원을 위한 법원으로 사용한 사례를 보고하였음.
- 또, 당사국 연사들의 발언에는 자산회복에 대한 공통적인 어려움도 포함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법공조 요청국과 피요청국간 법률 시스템의 차이, 자산의 확인·추적·동결·압류·몰수에서의 실무적 어려움, 쌍방가벌성, 공소시효 등임. 자원의 제약, 실무자 역량의 한계, 정치적 의지와 재정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언급되었음.
- 한 당사국은 발언에서, 전문가 회의 주제가 UN 다국적 조직범죄 협약 실무그룹 논의 주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면서, 양 기관이 상대측 활동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형사사건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정책 개발은 기본적으로 UN 다국적 조직범죄 협약 실무그룹에서 논의

하되, 전문가회의는 자산회복 등 UN반부패협약상의 특정 소관 부문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을 주장.

V. 이행점검과 기술지원

- 2019.12.18일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행점검과 기술지원 의제를 논의하였고, 총회 의장이 주재하였음.
- 사무국은 12월 17일과 18일에 총회와 병행해서 열린 제10차 이행점검 2차 속개회의 결과를 브리핑(CAC/COSP/2019/4)하였고, 1차 및 2차 이행점검 수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를 제공하였음. 사무국은 이행점검 메카니즘 성과 분석 보고서(CAC/COSP/2019/12)를 소개하였는데, 여기에는 2차 국별 점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 권고사항들과 이행점검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
- 사무국은 1차 이행점검(제3장과 4장)시 교훈에 바탕을 둔 권고사항과 결론을 포함한 사무국 노트(CAC/COSP/2019/3)에 들어있는 핵심 주제들을 개괄하였음. 또, 2차 이행점검(2장과 5장)에 따른 핵심 주제별 결론도 개괄하였음(2장은 CAC/COSP/2019/9, 5장은 CAC/COSP/2019/10). 추가로 1차 이행점검이 완료된 145개국에 대한 정보와, 1차 이행점검기간 중 진전사항의 개괄을 포함하여, 국별 점검 이후 당사국들이 취한 조치와 우수 사례 및 관련 경험, 기술지원 정보를 담은 보고서(CAC/COSP/2019/11)를 소개하였음.
- 당사국들은 이행점검 메카니즘에 따른 점검 절차가, 성공과 문제점을 측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별 법제도상의 약점을 확인하고, 기술지원 수요의 확인과 그러한 지원을 촉진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음.
- 여러 당사국은 이행점검 메카니즘이 운영규정 범위안에서 기능해야 하며, 그 성격이 정부간, 편향되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으며, 처벌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였음.

- 당사국들은 이행점검 메카니즘의 이행을 제고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별 점검 기간을 축소하고 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함. 여러 당사국들이 2주기 이행점검 기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 당사국들은 1차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들과 우수사례 경험, 이행점검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상황 등을 공유하였음. 부패 예방을 위한 입법 및 행정적 개선조치로는, 법인책임 도입, 불법 자산추적의 형사범죄화, 자금세탁 관련 입법 조치 강화 등이 있으며, 또 점검 결과로 드러난 문제점과 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 제고와 반부패 활동 효과 제고와 관련하여, 조정기구의 설립 또는 강화를 보고하였음
- 당사국들은, 기술지원 수요를 확인하고 동료간 학습과 경험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협약의 중요성과 이행점검 메카니즘의 유용성을 강조하였음
- 많은 당사국들이 UNODC가 국제적, 지역적, 국가 차원에서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있음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지원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함. 기술지원의 예로, e-learning 플랫폼 개발, 제도적 역량 평가 및 역량 배양, 민간부문과의 협력 지원, 일상적인 지원을 위한 멘토 파견 등을 언급함
- 총회는 ‘협약 3장과 4장 이행관련 교훈에 기반한 비구속적 권고와 결론’(CAC/COSP/2019/3)을 승인하였으며, 2020-2021년 실무그룹회의 업무계획(CAC/COSP/IRG/2019/L.3/Rev.1)을 승인하였음

VI. 반부패 특별총회

- 2019.12.19일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UN 반부패 특별 총회 의제를 논의하였고, 총회 의장이 주재하였음. 의장은 UN 결의안 73/191 “반부패 특별 총회”를 상기시키면서,

- 동 결의안에서, UN 총회가 2021년 상반기에 부패 예방과 척결,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 및 문제점을 다루는 반부패 특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UNCAC 당사국 총회의 감독하에 정부간 협상을 통해 사전에 합의안을 마련하며, 특별총회 준비를 주도하여, 특별 총회에서, 간결하고, 행동중심적인 정치적 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되었음을 소개.
 - 또한 UN 총회는 UNODC가 내용적 전문성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존의 자원 범위내에서 총회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결정하였음.
 - 의장은, 의장단 회의에서, 회원국의 기부금 요청 및 특별 총회 관련 홈페이지 마련 등 몇 가지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특별총회 준비를 시작하였음을 알림.
- UNODC 조약국 국장은, 무엇보다 UN 총회 역사상 특별 총회가 몇 번 없었는데, 지금까지 부패에 초점을 둔 특별 회의는 없었다고 언급.
- 국장은 2019년 11월 1일에 회원국에 기부금 요청을 공표하면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기부금 요청을 공표하였고 특별총회 홈페이지(www.ungass2021.org)를 개설하였음을 언급.
 - 또, UN 사무총장이 설치하고 UNODC, 정치·평화구축국(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UNDP가 의장을 맡는 유엔 반부패TF가 특별 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UN내에서 업무 조정 및 개념화를 맡고 있다고 함
- 모든 연사들은 2021 UN 특별총회 개최를 환영하면서, 동 총회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다짐하는 유일한 기회로 간주
- 여러 연사들은 특별총회와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강조하면서, 정

치적 선언은 법치 존중, 기본권적 자유, 인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

- UNCAC Coalition은 총회 준비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모든 제출 자료가 공개되기를 요청. 국제투명성기구 대표는 부패와 인권과의 연계, 실수요자 투명성 주제, 고액 자산 연루 부패의 척결 방안이 정치적 선언문에 포함되는 것을 제안함.

VII. 기타 사안

- 2019.12.19일에 열린 제9차 회의에서 기타 사안으로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과 다른 국제기구의 이행점검에 따른 관련 정보 활용’ 의제를 논의하였고, 총회 의장이 주재하였음.
 - 의장은 결의안 7/4 “반부패 분야에서 이행점검 메카니즘 수행 다자 기구간 시너지 제고”를 상기시키면서, 이와 관련한 사무국의 보고서 (CAC/COSP/IRG/2019/11)를 언급함
- 다수의 연사들이 부패 척결에서 시민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시민사회가 UN협약 이행점검 과정과 반부패 노력에의 참여 관련 경험을 공유하였음
- 일부 연사는 이행점검 메카니즘의 정부간 성격과 기존 결의안 4/6에 의한 합의안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따라 IRG 세션의 일부로 비정부기구에 대한 브리핑을 언급하였음

V. 제10차 이행점검그룹 제2차 속개회의

1. 회의 개요

- 제10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가 12월 17일(화)~18일(수)에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되었음

2. 점검국 추천

- 지난 1차 속개회의(9.2-4) 이후 추가로 가입한 국가가 없었고, 다시 제비뽑기를 요청한 국가도 없었기에 추천은 없었음

3. 이행점검 참여 현황

- 사무국이 보고한 협약 1주기 이행점검 참여 현황에 따르면, 점검 대상 184개 당사국 중 182개 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회의가 175회(방문실사 161회, 공동회의 14회) 개최되었으며, 169개 국의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작성되었음.
- 2주기 이행점검 대상국가 184개 중 96개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이행점검 회의가 67회(방문실사 62회, 공동회의 5회) 개최되었으며, 14개국의 결과 요약보고서가 작성되었음.
- 사무국은 이행점검 분석을 통해, 2016년 6월-2021년 중반까지 2차 이행점검 기간을 설정할 당시, 1개국 당 6개월 점검기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년이 소요되고 있어 21년 중반까지 완료는 비현실적이며, 2023년이나 2024년 중반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연장으로 인해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4. 다른 다자 이행 메카니즘과의 시너지

- 이행 메카니즘의 성과 논의를 위해, OECD 뇌물방지협약 동료간 이행

점검 메카니즘과 GRECO 이행점검 경험을 듣는 자리를 마련

- OECD 측은 이행점검에서 지연을 피하기 위해, 포커스를 좁히고, 맞춤형 국가별 점검과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4차례 이행점검에서 때로 지연을 경험했음을 토로
- GRECO 측은 질의 문항을 줄이고, 주제를 좁게 하여 당사국들이 기한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을 엄격히 정하고, 안내문을 평가전에 당사국들에게 보내고 있는 바, 당사국 대표단이 지연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5. 재정 및 예산 사항

- 사무국은 1차 점검을 완료하기 위한 비용은 마련되어 있으며, 2차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10차 이행점검회의(19.5월)에서 보고되었으며, 2주기 4년차와 5년차 점검비용은 상당부분 부족하며, 사무국은 작업 문서 번역 등 비용절감 노력들도 언급

6. 이행점검

- 사무국은 협약 제3장 및 제4장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에 근거한 비구속적 권고 및 결론(CAC/COSP/2019/3) 자료에 대해, 1차 이행점검을 완료한 169개국 대상 6,200건의 권고와 1,10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고

7. 2020-2021년 회의 일정

- 사무국은 UN 반부패특별총회 준비 회의와 실무그룹회의(이행점검·부패예방·자산회복·국제협력) 간 일정을 조정하여 2020-2021년 회의일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총회에서 채택하였음.

<2020-2021년 실무그룹 회의 일정(안)>

2020년		2021년	
6월 8일	점검국 추천	2월 22일 (앞뒤 2~3일)	UN특별총회 선언문 승인
6월 9-10일	◦ 11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예방/범죄화와 법집행) ◦ 11차 부패예방그룹 회의	6월 14일	점검국 추천
6월 11-12일	◦ UN특별총회 준비	6월 15-18일	◦ 12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주제 : 예방/범죄화와 법집행) ◦ 제12차 부패예방그룹 회의
8월 31-9월 1일	◦ 11차 이행점검그룹 1차 속개회의 (주제 : 자산회복) ◦ 14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9월 6일	점검국 추천
9월 2-4일	◦ UN특별총회 준비 (정치선언문 초안 비공식 협의)	9월 6-10일	◦ 12차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주제: 국제협력/자산회복) ◦ 15차 자산회복 실무그룹 ◦ 10차 국제협력 전문가회의
11월 16일	점검국 추천(오전)		
11월 16-17일	◦ 11차 이행점검그룹 2차 속개회의(주제 : 국제협력) ◦ 9차 국제협력 전문가회의		
11월 18-20일	◦ UN특별총회 준비		

VI. 기타 자료

1 총회 채택 결의안 (12.20일 오전 배포자료 기준)

(L3) 자산회복 국제협력 강화 및 동결·압류·몰수 자산의 관리 : 몰수 자산의 관리를 위해 당사국들이 관련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 등

(L4)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메카니즘 10주년 축하 : 2009년 11월 13일 결의안 3/1에 따라 이행점검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이행점검실무그룹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음을 상기하며, 10주년을 맞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청

(L5) 공공부문 청렴성 촉진 : 공공부문내 반부패기구와 다른 공공기관 간 내부 협력 강화, 공공기관에 맞춤형 청렴프로그램 수립 등을 촉구

(L6) 부패로부터 스포츠 보호 : 스포츠를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 국제기구, 협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간 협력 시너지 제고와 범집행당국과 스포츠 조직간의 협력 장려, 스포츠 부패 관련 조치를 개발·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당사국의 연락처를 사무국에 제공 등

(L7) 대중의 의식제고를 통한 청렴성 제고 : 부패의 개념, 위험성과 영향, 청렴의 중요성 등에 대해 대중적 의식제고에 노력하고, 특히 전자정부나 소셜 미디어 등 기술을 통해 의식제고와 정보 확산을 권고

(L9) UN 반부패특별총회 : 2018년 12월 17일 UN 결의안 73/191 “UN반부패 특별총회”에서 부패 예방 및 척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와 문제들에 대한 UN 특별총회를 2021년 1분기에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특별총회를 2021년 4월 26일~28일 3일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개막식에는 UN 총회 의장, UN사무총장, UN당사국총회 의장, UNODC 집행이사가 발언을 함. 전체회의는 당

사국, 읍저버 국, 읍저버 기관 등의 발언이 포함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확대의장단이 특별총회 준비를 위한 조치를 조직화하고, 총회에서 정치적 선언문 채택을 위해 사전 일정과 협의안을 마련함.

(L10) 부패척결에서 반부패기관의 효과성 제고 : 당사국들에게 반부패기관의 효과성제고를 위해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것, 부패예방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요청 등.

(L11) 마라케시 부패예방 선언의 사후이행 : 부패예방 실무그룹의 노력을 칭송하고, 당사국들의 국가적 반부패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반부패기구에 필요한 독립성과 기능을 부여할 것 등을 권고

(L13) 부패 측정 : 부패를 종합적으로, 증거에 기반하여, 다차원적으로 부패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반부패 전략과 정책을 설계 및 기획하기 위해, UNODC가 과학적으로 정당하고 객관적인 방법론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부패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L14) 군소도서국에서 UN반부패협약 이행 강화 : 동일한 제목하에 2015년 결의안 6/9, 2017년 결의안 7/7에 이어서, 군소도서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해, 공여국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기후 변화와 자연 재앙의 영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과 토지 자원에서 굿 거버넌스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등

(L15)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조장하는 부패 예방 및 척결 :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척결을 위해, 자금세탁을 통한 불법수익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할 필요가 있음

(L16) 효과적인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감사기구와 반부패기구간 협력 제고에 대한 아부다비 선언문 :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촉진 조치를 취할 것과, 감사기관 및 내부 감사부서가 협약 2

차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토록 장려할 것 등

(L17) 모든 형태의 부패 척결과 예방에서 국회 및 기타 입법기구의 역할 관련 우수사례 촉진 : 감시 및 감독과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등이 부패 척결과 예방 역할에 동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제12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에 동 의제를 포함할 것 등

(L18)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제 2 주기 연장 : 협약 2주기 이행점검 기간을 2024년 6월까지로 연장하여, 이행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

2 국제투명성기구 선언문

- 지속가능목표 달성에 핵심 장애물인 거대 부패 : TI는 거대 부패 (Grand corruption)*을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공적자원의 중대 남용이나 국민 상당수 또는 취약 계층의 인권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인한 결과로 정의하고, 이는 지속가능발전(SDG) 목표달성에 중대한 장애물임을 인식하여, (작은 부패가 아닌) 거대 부패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우선순위화 할 것을 요청

※ 거대 부패는 UN반부패협약 내에서는 고액이 연루된 부패(corruption that involves vast quantities of assets)로 불리며, 이와 관련하여 총회는 결의안 7/2(2017년)을 채택하였고, 그에 따라 전문가 그룹회의를 2018 리마, 2019년 오슬로에서 개최함

-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산회복 요청 : 국별 TI에서 6개국(프랑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튀니지, 우크라이나, 영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산회복 관련 평가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실소유자 투명성 부족, 의심행위보고의 수준, 부패자금세탁의 전문 조력자(은행, 변호사, 부동산업자 등)에 대한 낮은 처벌, 부패 사건과 관련 자산의 탐지와 조사를 위한 자원 부족, 국가간 협력 부족, 회복 자산 관리정책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됨
- 젠더와 부패: 형식, 영향, 해결책 : 동 선언문은 당사국들에게 성접대(sextortion) 등 부패의 성적 유형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패를 효과적으로 탐지, 조사, 기소, 처벌하는 반부패 입법을 확장하고, 젠더 포용적이고 젠더에 민감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젠더를 주류화하고, 부패의 성적 유형에 따른 데이터와 그로 인한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집할 것을 요청

③ 총회 기조연설문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Eigh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December 16–20, 2018
Abu Dhabi, UAE

Mr. President,

It is my honor to deliver this statement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and all other members of the Bureau on your election as officers of the 8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its hard work and great generosity as host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teady efforts to follow up the recommendations issued during the first review process in relation to criminalization, law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March 2015. The Act introduced criminal liability for both individuals and legal persons making improper solicitations or offering graft.

Korea also amended the Criminal Act in May 2016 to punish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ho, in return for an improper solicitation, helps a third party to get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nd to confiscate such advantages.

There were meaningful amendments to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s well. The amended Act introduced punitive damage for whistleblowers experiencing disadvantages as a result of whistleblowing. Proxy reporting by a lawyer was also included to prevent the risk of disclosure of whistleblowers' personal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second review cycle now.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more than 10 relevant agencies, the ACRC submitted the Self-Assessment Checklist responses for Korea's second review cycle, which started on Jun 2019.

And during the onsite visit in next year, Korea will bring together government agenc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experts to discuss areas which need more government efforts.

Mr. President,

The Korea government set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s the top priority among 100 government policy tasks and launched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chaired by the President, which established the five-year National Anti-corruption Plan.

In addition, a society-wide forum to discuss anti-corruption policy, the Public-Privat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collects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Such opinions are presented to the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ensuring the reflection of citizen opinions in policies. The Council monitors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as well.

Now let me introduce you Korea's efforts to join the global anti-corruption efforts in line with implementation efforts of UNCAC.

First, through cooperative MOUs with other countries, Korea has regularly exchanged anti-corruption capacity-building experiences and information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cond, with UNDP Seoul policy center, we have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s to the countries wanting to learn Korea's experience.

In addition, every year, the ACRC provides an anti-corruption training program fo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from 15 countries around the world.

Mr. President,

In June 2020, in partnership with the TI, Korea will host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which will bring together all stake-holders from th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Under the theme of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participants will discuss various topics on these three key-words.

In parallel with the IACC, Korea will hold the 9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This is to set the stage for communication to share anti-corruption efforts and practices. I would like to kindly ask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is meaningful glob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 sincerely hope to see you all in June next year in Seoul at the IACC. Thank you.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단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의 안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주최국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한국에 대한 유엔반부패협약 제1주기 점검이 완료된 이래,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 5월 「형법」을 개정하여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부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최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2주기 수검을 위해, 현재 10여개 이상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은 내년도에 예정된 현장점검 과정에도 정부부처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분야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여 정부 노력이 미진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의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반부패를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5개년 반부패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각계로부터 반부패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며, 정부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반부패 노력과 함께 UN반부패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속에서 반부패 공조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8개 국가와 반부패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매년 15개국의 반부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한국은 2020년 6월 공공부문과 민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반부패회의를 TI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Designing 2030 :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로 우리가 바라는 청렴한 2030년을 만들기 위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 회의와 병행하여, 한국 정부는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경험을 같이 공유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내년 6월 서울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④ UNDP 워크숍 기조연설문

#NextGenAntiCorruption: The future of anti-corruption battle and how cutting-edge technological solutions are helping to prevent and detect corruption

Hello, My name is 박은정 and it is my great pleasure to join you here as the Chairperson of Korea's anti-corruption agenc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 am really happy to share Korea's anti-corruption efforts with you, anti-corruption government officials and activists, in this meaningful workshop.

First, I am going to talk a littl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DP, the organizer of this conference.

As you may know, in 1966, the year when the UNDP opened its country office in Korea,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with small growth potential.

However, thanks to the government-led economic policies in the 1960s, citizens' strong educational fever, and hard working labor force, Korea achiev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for a short time.

We well understand that such a remarkable achievemen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DP. People in Korea always appreciate the aid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w Korea, a nation that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n aid recipient to a donor for just a half century, is the focus of attention and interest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want to learn Korea's experiences.

In the anti-corruption area, we signed a MOU with the UNDP Seoul Policy Center in 2015 and has actively disseminated the country's anti-corruption policies and experiences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the ACRC and the UNDP Policy Center shared Korea's anti-corruption policies with Vietnam in 2016, Myanmar and Kosovo in 2018, and Malaysia and Uzbekistan in 2019. Such cooperative project will be continued going forward.

Now I am going to talk about Korea's experiences of using new technologies to tackle corruption, the theme of today's workshop.

Since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e-government by digitalizing various government works. Especially, procurement and custom processes were digitalized to prevent public officials from abusing discretionary power and to prevent corruption risks arising from contacts with service users and make the process fast and transparent.

As for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the government digitalized all the official documents handled by or shared with all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The list of such documents is available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web-site (www.open.go.kr). So anyone who wants to request a government document can check this list and click the button for disclosure request.

The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which assesses country's efforts to provide public service a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ranked Korea on the third place, followed by Denmark and Australia in the 2018 survey result.

Another e-government example is ACRC's e-People which is an integrated online complaint-handling system. e-People receives civil complaints and policy suggestions on all government agencies and links them with relevant institutions.

Around 4.75 million complaints were filed on e-People in 2018 year alone.

e-People has strengthened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by receiving and handling civil complaints related to all government agencies and referring complaints to related authorities to be handled.

Thanks to these easy access on-line, citizens can enjoy a better public service. However, this entailed a downside. For example, because the system is free and easy to use, some people file repetitive complaints against many different agencies using the system, resulting more than thousand complaints to be processes by government agencies.

However even with this little abuse of the system, I firmly believe that government's efforts to enhance access to public services and expand communication with citizens through technology do help enhance transparency in a society and earn trust from the public.

Before I end my remarks,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which will be held in Korea in June 2020, jointly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I. Under the them of "Designing 2030 :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the conference will discuss various topics on these three key-words.

During the four-day conference, technological solutions to tackle corruption will be introduced every day in a

workshop called Innovation Hub.

I am confident that the conference will serve as a forum for global discussion on various solutions and experiences on corruption-fighting. I am kindly asking for your attention and interest in the conference.

I hope to see you all again in Seoul in June next year at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다음세대 부패척결 : 최첨단 기술과 부패예방"워크숍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오늘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신, 반부패 활동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런 뜻깊은 워크숍에서 한국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오늘 워크숍을 주관하는 UNDP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1966년 UNDP 한국사무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발전 전망이 어두운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근면한 노력에 힘입어,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UNDP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UN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이제 UN회원국에게 도움을 주는 원조국으로 반세기 만에 탈바꿈한 국가로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부패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여러 나라와 공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에 UNDP 서울정책센터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미얀마와 코소보,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반부패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 주제인 신기술을 이용한 부패척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한국정부는 e-정부를 1990년대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부업무를 전산화해 왔습니다. 특히 부패예방의 측면에서는 공공조달과 관세 업무가 전자화되어, 공무원 개인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인과의 접촉에 따른 부패위험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빠르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이 자체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과 주고받는 문서들은 전자화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이러한 공적 문서의 목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려는 이용자들은 이런 목록을 보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공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평가하는 UN의 전자정부개발지표(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에 따르면 2018년 조사결과 한국은 덴마크와 호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전자정부의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모든 정부대상 민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e-Peopl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민원과 정책 제안을 단일의 창구에서 접수받아 해당 공공기관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한국 국민이 정부에 제기한 민원은 475만 건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담당기관이 아니면 이송하고, 통합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한편으로는 악용하는 이용자들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으로 비용 없이 민원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수십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민원을 연간 수천건 제출한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성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투명성이 개선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2020년 6월 공공부문과 민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반부패회의를 TI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Designing 2030 :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로 우리가 바라는 청렴한 2030년을 만들기 위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동 회의에서도 Innovation Hub라는 부패 해결을 위한 기술적 solutions을 회의가 개최되는 4일동안 매일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경험을 같이 공유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내년 6월 서울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